

【서 평】

미국의 팽창: “사적으로 소유된 시장”의 확대

Emily S. Rosenberg,

Spreading the American Dream: American Economic and Cultural Expansion, 1890~1945

(양홍석 옮김, 『미국의 팽창: 미국 자유주의 정책의 역사적인 전개』,
도서출판 동과서, 2003), 380 pp.

박 구 병

(미국학연구소 연구원)

1982년 출간된 에밀리 로젠버그(Emily S. Rosenberg)의 『미국의 팽창』은 기업 중심의 경제적 팽창을 넘어 문화적 팽창에 주목함으로써 외교사의 지경을 넓힌 저작이다. 로젠버그는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1890년대부터 1940년대 냉전 대립의 강력한 한 축을 차지할 때까지 그 팽창 과정을 숨겨 있게 그려내면서 정부의 정책이 여러 단계에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이 시기 미국의 국가 유형을 후원국가(promotional state), 협력국가(cooperative state), 그리고 규제국가(regulatory state) 등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는데, 언뜻 보아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상업활동과 문화 전파 사이의 긴밀한 유대를 검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을 시도한다. 최근 저작이 아니라서 팽창의 여파를 둘러싼 현재적 의미를 포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팽창』은 학계라기보다는 일반 대중을 겨냥한 저술로서 1940년대 말 냉전 대립의 틀이 굳어지기 전까지 미국의 경제적, 문화적 헤게모니가 형성되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시각을 제공한다.

로젠버그는 미국의 탄생이래 미국 자유주의에 내재하는 팽창주의적 경향을 강조한다. 옴킨이 양홍석 역시 “소위 자유주의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세계 경제와 문화 장악 운동이 미국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p.8) 역사적 전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로젠버그는 미국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자유주의적 성장(개발) 제일주의”(liberal-developmentalism)로 좀 더 명료하게 지칭하면서 여러 역사적 선례를 통해 이것이 어떻게 선별적으로 적용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미국은 “자유주의적 성장(개발) 제일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고도의 기술과 대량소비 문화를 수출하고자 노력해왔는데, 저자는 이것이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사적으로 소유된 시장”(privately owned marketplace, p.347)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흥미롭게도 로젠버그는 미국의 팽창의 출발점을 1898년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이 아니라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Exposition)¹⁾에서 찾고 있다. 어떤 이는 1889년 워싱턴에서 당시 미국무부 장관 제임스 블레인(James Blaine)의 주도로 열린 제1차 범미주 회의(Pan American Conference)를 그 출발점으로 삼기도 하지만,²⁾ 대체로 미국이 “고립 외교”의 틀을 벗어나게 된 계기로서 1898년 미-西 전쟁을 꼽는데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립’의 탈피에 근거하여 이 전쟁에 주목하는 것이 경제적 팽창이나 이데올로기적 합리화의 관점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를 파악하려는 전통적인 접근이라면, 로젠버그가 1893년 박람회를 미국의 자유주의적 문화 확산과 팽창의 계기로 삼는 것은 새로운 각도

1) 시카고 만국박람회는 조선의 개화기 新지식인이자 기독교계의 거물 윤치호(1865~1945)가 경탄해 마지않았던 문명화의 상징이었다. 조기유학에 나섰던 윤치호는 일찍이 조선이 야만 상태에 머무느니 차라리 문명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기까지 하면서 (서구)문명화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서구제국의 시선을 내면화한 바 있다. 윤치호 일기 1890년 5월 18일자; 윤영실, 『“미국”과 식민지 근대주체 형성의 한 경로: 『윤치호 일기』를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 위임,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울, 2003, pp.115, 129.

2) Mark Gilderhus, *The Second Century: U.S.-Latin American Relations Since 1889*,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Inc., 2000.

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형성 과정을 이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팽창』은 서론(1~2장)과 결론(11장)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저자가 민간부문과 정부 간 이해관계의 파동에 따라 미국의 팽창 정책을 세 단계로 구분한 것과 일치한다. 첫째, 후원국가 단계(3~7장)는 세기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벤자민 해리슨에서 우드로 윌슨 행정부까지)인데, 이 시기 정부의 역할은 주로 기업 활동을 후원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이 시기 미국은 유럽 열강과 달리 해외 영토의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상업활동을 매개로 한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의 확대에 주력하는 독특한 제국정책을 전개했다. 1890년대는 남북전쟁 이후 농업세력의 퇴조와 상공업세력의 우세가 더욱 분명하게 교차하는 시기였다. 이후 산업사회의 가치가 농업공동체적 가치를 압도하면서 미국의 무게중심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몰락하면서 1904년에 이르면 미국의 산업계는 300여 개의 대기업이 5,000여 개의 개별 업체를 지배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돌입했다. 이러한 대기업의 독점, 힘의 집중과 부패에 대한 도덕적 반발과 정치·사회 개혁의 요구가 “혁신주의”를 탄생시킨 시대(Progressive Era)였지만,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해외 팽창을 적극 후원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로젠버그는 경제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문화적 팽창, 예컨대 기독교 청년연합회(YMCA)³⁾의 활동영역 확대와 예산 증대, 영어교육 및 서적, 영화의 확산, 그리고 신문과 대중잡지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력 확대에 주목한다. 또한 1905년 설립된 기업가 모임 국제 로터리클럽이나 통신 및 문화전파 사업의 확대를 통해 미국의 가치와 이념이 점차 세계화되었음을 지적한다.(p.162) 자선의 형태를 띤 자유주의적 문화의 전파야말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것이다.

3) 미국 테네시 주 밴더빌트 대학교의 교수 오스카 E. 브라운은 1914년 세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대영제국, 러시아제국, 일본제국, 중국, 미국, 그리고 기독교 청년연합회(YMCA)”를 당시 전 세계적인 영향을 지닌 권력집단으로 손꼽은 바 있다.(p.63)

둘째, 1920년대 후반 협력국가(8장)의 등장을 통해 정부의 팽창 후원정책은 한 차원 격상되었다. 로젠버그는 허버트 후버 행정부(1929~33)를 “전형적인 협력정부”(pp.213, 343)로 인식하는데, 여기에서 “협력”은 기업뿐만 아니라 특정 민간 자선단체를 후원하여 공적인 목적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p.215) 로젠버그에 따르면, 후버 행정부는 민간 부문의 여러 수단과 장치를 통해 공적인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 시기에는 공익의 달성을 위해 정부의 후원대상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로젠버그는 정부가 협력 대상으로 선택한 기업이나 자선단체를 “선발된 기구”(chosen instruments, p.226)라고 명명한다. 전 단계의 후원국가가 親기업적 후원과 보호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 즉 옮긴이의 표현을 빌자면 “펌프질”(p.11)에 주력했다면, 그에 반해 협력국가는 후원과 협력의 대상이 더욱 확대하여, 특히 “선발된 기구”를 통해 공익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상과 경제관련 조약을 비롯하여 정부기구의 확대 개편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 초 과잉생산에 따른 짧은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1920년대는 대체로 호황 국면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식 팽창이 절정에 달했다. 또한 “미국적 계획”이 뿌리내린 자본가의 시대이자 노동운동의 침체기(lean years)로 알려졌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와 기업의 전성기에 찾아 온 대공황은 기술혁신이 결여되고 투기적 요소에 의존한 당시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대공황 속에 출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1933~45)의 집권기는 규제국가(9~10장)의 효시였다. 후버 행정부 당시 세계무역은 약 60% 이상 감소했고 실업자 수는 미국에서만 전체 노동인구의 1/3 수준인 1,600만, 세계적으로 약 5,000만에 이르렀다. 대공황의 타개를 최우선적 목표로 등장한 규제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사회·경제 활동의 여러 영역에서 통제와 조정을 주도했다. 획기적인 대공황 타개책이었으나 1936년 말 보수적 성향의 대법원으로부터 “주권(州權)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위헌 판결

을 받아야 했던 뉴딜(New Deal) 입법은 이를 뒷받침한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농민과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조정법(1933)을 마련했고, 1935년 전국 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을 통해 실업자 구제정책을 실시하고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등 각 생산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뉴딜 시대는 거대국가뿐만 아니라 거대노조의 전성기였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주 40시간 노동제와 최저임금제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 1935년 전국 노사관계법(일명 와그너 법)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제도의 기틀을 다졌다. 그리하여 1940년 당시 노조 가입자 수는 사상 최대인 900만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면서 규제국가의 면모가 더욱 뚜렷해졌다. 한편 세계 항공업의 분할 비율에서 드러나듯이 유럽에 대한 미국의 우위가 완연해졌다.(p.298) 이 시기는 자유방임에서 벗어나 연방정부의 통제권이 강화된, 말하자면 새로운 중상주의의 시대였다. 뉴딜 시대 규제국가의 대두는 1940년대 후반 냉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증폭된 국가주도의 관리체제의 예비 단계인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강점은 미국의 문화적 팽창에 대한 고찰, 즉 2장 자본가, 기독교인, 그리고 카우보이(1890~1912)와 5장 통신과 대중매체 장 악운동(1912~32), 10장 문화제국주의(1939~45) 부분에서 드러난다. 2장에서는 1890년대 미국식 자유주의의 세 가지 지주, 즉 무제한적 무역과 투자, 자유로운 기업활동, 문화교류의 자유로운 흐름을 바탕으로 미국 팽창의 원리를 수립(p.75)한 이래 기독교 선교사들의 해외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세기말 서부극(Wild West Show)이나 ‘영웅’ 카우보이와 같이 ‘세계화’된 대중문화의 표상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p.74) 보여준다. 5장에서는 후원 및 협력국가 단계에서 어떻게 문화적 팽창의 토대가 놓였는지에 관해 흥미롭고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10장에선 규제국가의 주도 아래 어떻게 문화 영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유주의적 문화를 여러 지역으로 확산시켰는지 설명한다. 예컨

대 1930년대 할리우드의 애국주의 전통의 강화라든가 영어교육을 위한 문화센터의 설립,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정보” 프로그램의 제공, 미 공보원(USIA)의 활동을 통해 문화적 팽창을 거론한다.(p.325)

『미국의 팽창』에서 다룬 시기는 1941년 언론인 헨리 루스(Henry R. Luce)가 명명했던 대로 20세기를 “미국의 세기”(The American Century)로 만든 문화적 토대와 저변이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흑인 여성학자 로젠버그는 자유주의적 합의가 존재하는 미국의 제도와 문화를 전 세계로 수출하여 지속적인 번영의 틀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루스의 인식과 자국의 외교사적 전통에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 셈이다. 루스가 강조한 것은 정치·경제적 권력을 넘어선 미국의 문화적 매력의 확산이었는데, 로젠버그는 “가능한 한 가장 자유로운 상호교환”(freest possible interchange)이란 예컨대 할리우드에 의한 세계 지배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응수한다.(p.162) 로젠버그는 다른 논문을 통해, 루스가 근대성의 통로로서 바라 본 “미국의 세기”는 소비문화와 대중생산의 이미지에 토대를 둔 것이며 소비능력과 자유 그 자체를 동일시하는 미국식 전망을 강하게 반영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⁴⁾

로젠버그가 주장한 바 “사적으로 소유된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한 미국의 “자유주의적 성장(개발) 제일주의”는 몇 가지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p.33) 첫째, 타국이 미국의 역사적 발전의 경험을 그대로 반복해야 한다는 믿음, 말하자면 미국을 발전의 모범이자 교과서로 수궁해야 한다는 신념, 둘째, 경제활동 영역에 관한 확고한 자유방임적 신념, 셋째, 국가 간 무역과 투자에 적용되는 개방적인 사고, 넷째, 문화와 정보 선택의 자유 인정, 다섯째, 해외의 기업활동과 문화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등이다. 문제는 미국이 확산시키고자 한 자유주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점일 텐데, 바로 이 대목에서 로젠버그의 통찰력이 돋보인다. 로젠버그는 미국의 성장과 팽창이 진정 자유주의적

4) Emily S. Rosenberg, 'Consuming Women: Images of Americanization in the "American Century"', *Diplomatic History* 23 (3), 1999, p.496.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유로운 시장”이란 일종의 허상이었음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적 외양과 배치되는 보호무역의 즐기찬 시행(p.37)과 선별적인 자유무역의 요구(p.145)가 훨씬 실제에 가까웠다. 그리하여 저자는 “자유로운 시장” 대신 앞서 언급한 대로 “사적으로 소유된 시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19세기 말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를 일그러뜨렸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다양한 공식·비공식적 기구들은 자유주의적 강령을 선택적으로 적용했고(p.344) 자유주의의 전파 역시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p.349)

자유주의적 문화의 확산을 “슬프지만 꼭 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p.83)로 받아들이는 것은 1845년 뉴욕의 언론인 존 오 설리번이 요약한 바 있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의 연장인 셈이지만, 이는 명백히 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그 팽창의 전제적 경향을 감추고 있었다.(p.75) 1934년 루즈벨트가 “선린정책”을 표방하기 이전 니카라과(1912~25, 1926~33), 멕시코(1913~20), 도미니카(1913~24), 아이티(1915~34), 쿠바(1916~33), 에콰도르(1925~28), 엘살바도르(1931~32)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미 해병대가 수십 차례 직접 개입했을 때에는 늘 “민주주의를 위한 개입” 또는 “민주주의의 수출”⁵⁾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졌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또 다른 독재와 정국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곤 했다. 미국은 각 지역의 독재정권과 조직적인 탄압 체제를 지원하면서 1930년대까지 어느 곳에서도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성립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하여 페루의 민중주의자 아야 데 라 토레(Victor Haya de la Torre)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가리켜 “독재자들의 좋은 이웃”(the good neighbor of tyrants)이라 칭하기도 했다.(p.336)

5) Paul W. Drake, 'From Good Men to Good Neighbor,' in Abraham F. Lowenthal, ed. *Exporting Democracy: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Themes and Issu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 pp.3-40.

『미국의 팽창』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과학과 지역학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된 新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나 세계화 전략 같은 현안을 더 폭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980년대 이래 전 세계를 휩쓴 이른바 新자유주의적 열풍은 미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자유주의적 성장(개발) 제일주의”의 손자뻘 되는 셈이다. 이 주제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대체로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정책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책은 최근의 변화에 대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안내서라 할 만 하다.

오늘날 세계화라 했을 때, 사실상 그것은 “미국화”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에게 세계화란 합리적 사고를 증진시키고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진 자본주의 세계, 특히 미국에 대해 정보를 많이 가진 이들이 권위를 누리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팽창』은 우리에게 문화적, 인종적 편견과 미국식 “자유시장 근본주의”(free market fundamentalism)⁶⁾, 그리고 “미국예외론”(American Exceptionalism)이라는 일방주의적 신화(p.57)를 넘어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겠다. 또한 미국 내 정치적 소수파의 시각을 잘 녹여 낸 흑인 여성학자 로젠버그의 인식이 요즘과 같은 “역사전쟁”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상호신뢰와 평화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허상에 가까운 “민족정기”를 강화하고 애국주의에 기대거나 허술하게 남의 언어를 모방하면서 우리 삶을 지탱해 온 방식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듯 하다.

끝으로 『미국의 팽창』을 읽으면서 아쉽게 느낀 대목을 지적한다면, 후원국가와 협력국가의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이다. 다른 단계에 비해 협력국가에 관한 설명은 다소 미흡하며 분량

6) Salim Muwakkil, “Cornel West: Public Intellectual”, November 4, 2004, http://www.inthesetimes.com/site/main/article_rss/cornel_west_public_intellectual/

상으로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의 사회·경제 정책뿐 아니라 외교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렇다면 굳이 세 단계로 나누어 미국의 팽창을 고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달리 말해 자유방임과 개입 및 통제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넘어 협력국가 단계를 설정했을 때 미국 외교사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또 후원국가와 협력국가 사이의 차이가 어떤 측면에서 양자가 규제국가 단계에 비해 지닌 차별성만큼이나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지 좀 더 명료하게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로젠버그는 후버 행정부 때 전형적인 협력정부로 “전환”되었다고 결론짓고 있지만(p.343) 옹킨이는 같은 행정부를 “대표적인 후원정부”로 이해하고 있다.(p.16)

아울러 誤譯이라고까지 말할 순 없으나 번역문이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눈에 쉽게 띈다. 우선 “~에 있어서”라는 일본어투가 지나치게 많이 쓰였는데,⁷⁾ 이는 경우에 따라 “~에서”라든가 다른 식으로 번역해도 문제될 게 없는 불필요한 어구이다. 또 번역 어휘의 일관성 부족은 편집과정의 실수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경우엔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예컨대 톰슨과 톰프슨(p.128)처럼 심지어 같은 쪽에서도 동일인명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컬럼비아 박람회”(p.23)나 “콜롬비아 박람회”(p.27)는 같은 사건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이 행사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관련된 것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 번역이다.

7) 김세중 외,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 한겨레신문사, 2004, p.254 참조.